

#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65 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안		
발의자	김안숙 의원외 8명	발의년월일	2018. 12. 20.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 I.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제4조)
- 나.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 5조)
- 다. 공문서 등의 작성방법 규정 (안 제6조)
- 라.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방법 규정 (안 제7조)
-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8조)
- 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어기본법」 제4조, 제21조
-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 II. 검토 의견

###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현재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등 총 17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2. 주요 내용 검토

### 1)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4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부합하는 규정임.

### 2)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규정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서초구 실정에 맞도록 다듬은 것으로서 상위법에 부합하는 규정임.

### 3) 공문서 등 작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강행규정인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공문서 작성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됨.

#### 4)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됨.

#### 5)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 4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준용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됨.

#### 6) 교육 및 포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공기관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국어기본법』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에서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국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9조와 제10조의 교육 및 포상 관련 규정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Ⅲ. 참고자료

#### 1. 관계법규

##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공문서의 작성)

-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업무 촉진에 관한 규정」**

###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